

정부 22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운전면허 등 발급 불편 줄여 국민들 전자정부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의 전자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액티브 X, 실행파일(EXE) 등 PC에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15개 기관과 공동 추진해 온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한 22개 웹사이트는 월평균 약 147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24를 비롯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경찰민원, 전자통관, 복지포, 운전면허 등이다. 대다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이트들이다.

다만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전체 발급량의 93%를 차지하는 21종의 민원에 대해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했으며,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플러그인 제거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그동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공인인증서의 경우 기존의 공인인증서 방식과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브라우저 인증서를 선택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어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들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및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를 사용해야 한다. 구형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22개 웹사이트 외의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플러그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폭염에 지친 이웃 곁으로 13일 오후 대구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가운데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여름나기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폭염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할 여름 김장 김치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 "친모와 범행 공모"

법정서 증인 진술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계부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 가운데 이 계부는 친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B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수면제 처방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로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 등 일부 내용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살해동기에 대해 "집에서 씻고 나오니 B씨가 내 핸드폰을 들고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후 여행을 갔고 첫날 술을 마시고 다음을 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간 자리에서 B씨가 딸을 죽이겠다고 화를 냈고, 저는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갈게"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월중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정형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주

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함에 따라 그 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까지 대부분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B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말리지는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B씨가 알고 있었고, 시신유기된 장소에도 3차례 B씨와 함께 다녀왔다고 증언했다. B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A씨가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먼저 가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증언에서도 A씨는 B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고, 같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A씨는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자기나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

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동범행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2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B씨와 함께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인호 기자



한일갈등에도 일본인 입국 21% 늘어

최근 3개월간 85만명... '화이트리스트' 7월 19.2% ↑

최근 3개월간 출입국자가 240만 5024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보복을 둘러싼 한일 갈등 속에서도 일본인 입국자는 같은 기간 21.6%나 늘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된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법무부는 이 기간동안 국민 출입국자는 1499만5087명으로 5.1%, 외국인 출입국자는 907만9937명으로 17.9%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 출국자는 759만 2581명으로 5.2%, 외국인 입국자는 449만5176명으로 17.2% 늘었다.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 일본인 입국자는 8만4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6% 증가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달에는 일본인 입국자가 17만72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하면 2.6% 감소했다.

중국인 입국자가 155만48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8%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4.6%를 차지했다.

타이완 입국자는 34만1927명으로 15.1% 늘었다.



이슈 판결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법원 "처분행위 금지"

조카 명의의 부동산만 해당... 재단·법인 명의는 기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적으로 인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손 의원 조카 손 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조카는 처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조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이 재단·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표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이고 검사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비밀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표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 일부가 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행정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부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이 재판부에 전달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